통일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22.(금)	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지승우 (02-2100-5730)
		담당자	서기관 강노을 (02-2100-5731)
			사무관 최진용 (02-2100-5733)

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「비핵 · 평화 · 번영」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

- 2022 통일부 업무보고 -

□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월 22일(금)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.

o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만큼 통일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 설계와 함께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.

□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정립하였습니다.

비 전	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- 비핵 · 평화 · 번영의 한반도 -
3대 원칙	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
5대 핵심 추진과제	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민 ·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

□ **윤석열 정부의 통일·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「비핵·평화·번영의 한반도」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.**

* 헌법 제4조의 구현 추진

□ **「비핵·평화·번영의 한반도」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.**

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

-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입니다.

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

-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입니다.

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

-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입니다.

□ **통일부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하에 다음의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.**

□ **첫째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습니다.**

o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-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o 또한,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·이행해 나갈 것입니다.

-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,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둘째,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o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며,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.

-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,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, 이산가족·납북자·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·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또한,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

o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셋째,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.

o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·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, 북한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
-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, 취약계층(영유아·산모 등) 지원,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.

o 이산가족·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-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'이산가족의 날'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겠습니다.

o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당면하여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,

-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,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,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
o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 고용의 질·삶의 질을 개선하고, 사회적응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넷째,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.

o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o 겨레말큰사전,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·역사·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o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·식수·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,

-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, 재해재난 협력, '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'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o 아울러 소식을 전하는 사업(언론, 출판, 방송 등)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습니다.

□ 다섯째, 국민·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.

o 우선,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「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」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법안은 △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△통일관계장관회의 △통일영향평가제도** △통일준비인력 양성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 마련 예정

** 통일영향평가제도 법제화 이전에는「통일감수성 진단」사업 추진

-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미래세대 대상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,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, 민주,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o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·유럽·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가겠습니다.

o 아울러 지난 30년간의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만들어진 '9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반도와 주변 환경, 남북관계, 국민들의 인식까지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

- 이에 정부는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,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,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·발전시키겠습니다.

□ **마지막으로, 앞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, 통일부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.**

o 조직 운영과 관련, 통일전략·정세분석·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,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

□ **통일부는 미·중·러간 전략경쟁의 심화,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'통일지향적 공존'을 이루고 비핵·평화·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

※ 붙임. 주요사업 세부계획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| **주요사업 세부계획**

1 담대한 계획 수립

o 대통령 취임사에서 「담대한 계획」 표명('22.5.10)

* "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"

o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*에서 「담대한 계획」에 대한 공감대 확인('22.5.21)

* "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,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"

o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「담대한 계획」 수립 진행 중

- 윤석열 정부의 「담대한 계획」은 역대 정부의 비핵화 정책의 맥락을 이어가면서 진화와 발전을 도모

【 「담대한 계획」 주요 특징 】

o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지원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

o 先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·동시적 이행

o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

2 인도협력 추진

o 정치·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,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

- 기존 우리의 대북제의(5.16) 포함, 코로나 방역협력 우선 추진

* 5.16 △대통령(국회 시정연설), 대북 코로나 지원 의사 천명 △통일부, 백신·의약품·마스크·진단도구·기술협력 등 제공 의사 및 남북 실무접촉 제의

- 취약계층(영유아·산모 등) 지원, 전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확대

【 관련 최근 북한 동향 】

o 5.12 당 중앙위 8기 8차 정치국회의, 코로나(오미크론) 발생 최초 공개

o 5.29 당 중앙위 정치국협의회, "전국 전염병전파 상황 통제·개선 긍정 평가" 언급

o 6.16 해주시에 '급성장내성전염병' 발생 공개

o 6.30 국가비상방역사령부, 바이러스 유입 경로 조사결과 발표(7.1 노동·중통)

o 7.18 18시 기준(7.19 보도), △(신규) 유열자 250여명 △(누적) 477만 1,860여명, 사망자 74명

3 이산가족 · 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추진

o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 및 생존자 감소, 시급한 과제로서 적극 노력

-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, 대면·화상 상봉 등 추진

-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전면적 생사확인 등도 병행 추진

o '이산가족의 날'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통해 국민 인식·공감대 제고

* △'82년부터 민간 주관으로 '이산가족의 날' 기념 △19-21대 국회, '이산가족의 날' 기념일 지정 관련 「이산가족법」 개정안 발의(현재 외통위 계류 중)

【 관련 현황 】

o (이산가족 현황) 통일부 '이산가족찾기' 총 133,641명 신청, 생존 44,232명(33%, 평균연령 83세, 80대 이상 67%, 직계가족 40%), 사망 89,409명

- '00년 이후 △당국차원 상봉 28회(21회 대면, 7회 화상) △남북 4,847가족/24,352명 상봉 △8,197가족/59,406명 생사확인

o (납북자 등) △전후납북자 516명 추정 △전시납북자 4,777명 결정 △억류자 6명

4 북한인권 개선

o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 개선 지속 추구

- 국제사회 활동 참여, 민간단체 지원 등 대내외 협력 강화

o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'북한인권재단' 출범 적극 추진

-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 요청 예정, 이후 후속조치 신속 진행

* 이사진 구성 시 후속절차 : 창립이사회 개최, 이사장 선출(호선) 및 상근이사 임명 → 설립 등기 → 창립식 개최

【 북한인권재단 개요 】 * 북한인권법 제10조~12조

o **(기능)** ▵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·연구 ▵남북인권대화,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▵그 밖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심의,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▵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

o **(임원)**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, 통일부장관 2명과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(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, 이사장·이사 임기는 3년), 국회 추천시 여·야 교섭단체가 1/2씩 동수 추천

o **(예산)** '22년 예산 4.75억원 편성(2개월 운영비), 연내 출범시 예비비 편성

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

o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 및 삶의 질 개선

- 정착금 등 초기지원체계 개편

-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, 교육·주거·의료 등 기본 복지 강화

o 위기가구 및 소외계층 사회적응 안전망 강화

- 신속한 위기상황 발굴과 지원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

【 관련 현황 】

o (입국현황) '22년 2/4분기 기준 누적 입국인원 33,834명(△남 9,478 △여 24,356)

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 초기 지원제도

- 정착금: △기본금(초기정착) △장려금(취업유도) △가산금(고령·장애·장기치료 등 취약계층 지원)
- 주거지원 : △주택알선 △주거지원금
- 일자리지원 : △직업훈련(훈련비 전액) 지원 △취업 알선 △고용 인센티브 △창업 지원(컨설팅, 경영자금 등) △자산형성지원(미래행복통장) 등
- 교육지원 : 중·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(사립대 50% 보조)

6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

o **(필요성)** 기후 및 환경 변화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, 한반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 증대

-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저하로 인한 환경 재난 등은 남북 주민의 삶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

  * 北, VNR(자발적국가보고서)('21.7월)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사 표명

o **(주요내용)** 비제재분야 상호 현안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

- 미세먼지·자연재난·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

- 산림·농업·수자원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

- 남북 접경지역(DMZ)을 대상으로 한 협력 추진

o **(당면계획)** 남북 그린데탕트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

- 단기 및 중장기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계획 수립

-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관련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

7 「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」 제정 추진

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「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」 제정 추진

- △기본계획 수립 △통일관계장관회의 △통일영향평가제도* △통일준비 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

  * 각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국책사업 추진 시, 그 결과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영향평가 실시

  - 구체적인 내용·방법 등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모델링 진행 예정

- 유사입법 사례 조사,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제정

8 국민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

o 각계 각층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전국 7개 주요 거점별로 개최하여, 우리 정부의 통일·대북정책 분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

- 성별·연령·지역·이념이 다른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

  * △국민 대화(만18세 이상 국민) 7회 △활동가 대화(진영별 시민사회 활동가) 7회 △청소년 대화(학생) 15회 등 추진

- 특히,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열린 광장포럼·토론회 등 개최

o 통일·대북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틀을 마련하여 심도있는 민관 정책협의 및 여론주도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

- 전국 7개 거점별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순회 토론회 등 개최

o 통일·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관련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물리적 거점·공간 운영

【 지역별 통일+센터 현황 】

o **(현황)** 2018년 인천센터 旣 개소, 2023년 호남센터 및 2024년 강원·충청·경기센터 개소 예정
o **(운영)** 통일부 총괄지원,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고 중앙·지방 정부가 협업하여 운영
o **(내용)** △북한·통일 정보자료 수집·제공 △통일문화 및 남북주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

9 미래세대 대상 통일교육 강화

o 자율적·창의적 통일공론 공간 제공 및 미래지향적·실용적 통일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

- 미래세대 대상 통일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가상·현실세계 융합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참여·체험형 통일교육 확대

- 통일교육선도대학,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담론의 권역 거점으로 육성, 연계대학 및 지역사회로의 체계적 확산 추진

o 미래세대에 친숙한 메타버스,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공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확대, 통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

- 메타버스 등 활용 에듀테크 콘텐츠 제작·사용 과정에서 수요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참여형 콘텐츠 강화

- 유튜브·페이스북 등 뉴미디어와 협업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결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

【 2030세대 통일교육 프로그램 현황 】

o **참여·자율·창의 존중 통일공론 공간 형성**
- **(피우지(P-UZY) 아카데미)** 자율적 공론의 장으로서 년 2회 개최('22년)
- **(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)** 창의적 통일준비 위한 교육과정(36주, 50여명)

o **미래지향적·실용적 통일담론의 체계적 확산**
- **(통일 담론 전파 거점 육성)** 통일교육선도대학(9개), 지역통일교육센터(10개) 권역 거점 육성
- **(통일 담론 확산)** 대학 내 통일특강, 강좌 개설 등('22년 50개 대학)

o **재미와 의미를 결합, 세대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**
- **(도서고급화, 영상전문화)** 민간과 협력, 도서·영상 등 전통적 교재의 고급화·전문화·세분화 추진
- **(공감·체감형 콘텐츠 개발)** 뉴미디어 특성에 맞게 참여자가 선호하는 통일 공감·체감형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개발
- **(에듀테크 콘텐츠 개발)** 메타버스, AR·VR 등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형 에듀테크 콘텐츠 신규 개발 확대

⑩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 발전적 계승

o **(추진배경)** 지난 3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

-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격차 및 이질화 심화, 민족의식 약화

- 국내적으로도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 거부감 증가, 대북 피로감 누적

o **(주요내용)**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 계승·발전

o **(세부계획)** '24년 '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' 계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

- 전문가와의 민관협업을 토대로 통일방안 발전안 초안 마련

- 세대·지역을 망라한 사회적 대화,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

- 국회 내 여야 간 초당적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

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】

o **(개요)** '94년 광복절 계기 김영삼 대통령 발표,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
o **(배경)** 국민 의견 수렴, 국회 공청회, 여야 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수립한 「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」('89.9.11 노태우 대통령 발표) 내용 계승 및 보완·발전
o **(내용)** 자주, 평화, 민주 원칙 下 「화해협력 → 남북연합 → 통일국가」 順 진행

⑪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조성

o '한반도국제평화포럼(KGFP)' 과 유사한 국제 포럼을 미국·유럽·아세안에서 단계적 확대 개최

- '23년부터 개최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

- 북한의 올바른 선택 유도,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

* 민·관과 재외동포, 한반도 문제 주요 싱크탱크 및 한국학센터 등과 협업하여 개최

【 한반도국제평화포럼(KGFP) 】

o **'한반도 평화' 주제 대표적 1.5트랙 국제회의로 2010년 창설**

- 2022년 올해는 7.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계기, 25개 주요 연구기관,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8.30-9.1 3일간 총 30개 전문가 세션· 1.5트랙 전략대화 등 온·오프라인 운영 예정

* 주요 연사 : 강인덕 前 통일부장관, 호르스트 텔칙 前 서독 총리 외교안보보좌관,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, 후안 엔리케스 미래학자 등

o 대북 관여 주요국·국제기구와의 대화 및 협력 강화

-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등과 함께,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

  * 우리정부의 '담대한 계획' 등 대북정책 관련 국제사회 설명 및 협력방안 모색

o 통일 공공외교 추진 및 인프라 강화

- 해외 북한·통일 관련 신진연구자 방한 연구 지원('20년~), 해외 북한·통일 관련 정책·학술 연구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해외의 한반도 평화·통일 문제 이해 제고 및 우리의 통일 공공외교 활동기반을 지속 확충

【 '통일' 관련 국제 학술교류 지원 】

o 해외 북한·통일 관련 신진연구자 방한 연구 지원

- 2020년부터 한반도 통일 및 북한 관련 신진연구자 육성 일환으로, 국내 학위과정 또는 펠로우쉽 연구과정 지원('22년 학위 3명, 펠로우 7명 지원중)

o 해외 북한·통일 관련 정책·학술 연구 지원

- 2022년부터 미국, 중국, 일본, 유럽 등 관계국 내 한반도 전문가 저변 확대 및 학술교류를 위해 공모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